

기획연재 | 가짜뉴스와 사회통합 “脫진실의 동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③ 가짜뉴스 규제 해외 입법사례

유럽선진국,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 시스템 도입 추세

◇ 연재순서 ◇

- ① 가짜뉴스란?
- ② 가짜뉴스 목적과 유포
- ③ 가짜뉴스 규제 해외 입법사례
- ④ 가짜뉴스, 우리의 대응

영국

영국정부는 2019년 4월 초 런던 대영박물관 내 국립 도서관에서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표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백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적, 법적 책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독립적 규제 기구를 두는 등 온라인상의 유해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 발표

백서의 핵심내용은 ▲법적의무를 포함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게 ‘보호의무’ (Duty of Care)를 부과한다. ▲이들 기업이 법적 보호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동수칙’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고, 이의 이행을 지도, 감독할 독립된 규제기관을 둔다 ▲위반 기업과 임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해당 링크 삭제와 같은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영국 정부의 백서에 대해 일간지 <가디언>은 사설에서 사용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는 영국을 인터넷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면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키워가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독일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서 자주 인용하는 것이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법이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으로, 줄여서 ‘네트워크 법집행법’ (NetzDG)이라 부른다.

이 법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플랫폼(포털이나 SNS)에 게시된 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7일 이내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된 게시물이 명백하게 위법적인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50억)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그런데 독일에서 이 규제안 시행 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허위정보로 신고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내용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불법 정보의 판단을 플랫폼사업자에게 맡긴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판단토록 한 것인데, ‘형벌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고가 들어온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의 판단이 때로 매우 까다로운 데다, 그냥 두면 막대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기에 플랫폼 사업자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부터 하고 불 인센티브가 생긴다. 이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콘텐츠가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일 야당들은 법안을 제정할 당시부터 입법에 반대했다. 자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정부가 벌금을 매겨 온라인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에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소송을 냈다.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2018년 11월 21일 선거운동 기간에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보 조작 대처에 관한 법안들’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정보조작 대처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7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왔지만, 상원은 9월 이를 기각하고 하원에 다시 내려보냈다.

법안이 상·하원을 오간 것은 야권과 언론단체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이 법은 가짜뉴스를 ‘선거의 정직성(Honesty)을 바꾸려는 의도가 내포된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인 주장들’이라고 정의했다.

정보조작 대처법 법안 통과

프랑스가 이렇게 선거에 초점을 맞춰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2017년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야권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대의견의 초점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맞추어져 있다. 먼저, 이 법이 규제하겠다는 ‘허위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함에도 검열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허위정보를 ‘거짓 정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검증 가능한 요소가 부족한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이나 비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실은 즉각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허위정보 개념 정의는 규제를 위한 것치고는 모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호에 계속>

이봉현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www.koreaff.or.kr

“국민을 행복하게, 국가에 도움되게”

국리민복(國利民福) 가치 실현에 앞장 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새로운 가족을 모십니다.

회원모집

주요 활동

국리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가치 수호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계 정착

민복
가치관 정립 국민운동 전개
사회적 안정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배려와 관용이 있는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가입 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
홈페이지(www.koreaff.or.kr)서 신청
- 오프라인 회원가입
해당 지역 사무처 문의(우측 연락처 참조)

기간 연중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에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 및 3,344개 읍·면·동분회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32개 지역에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